

[종합]

호오류寺 지은 백제 匠人들 1,400년 이어온 日 건축회사 파산

1천400년전 백제인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세운 일본 최고의 건축회사가 파산했다.

오사카(大阪)에 본사를 둔 건설사 공고구미(金剛組)(현 케이지건설)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26일 파산 수속을 밟기로 결정, 최근 오사카 법원에 자기파산을 신청했다.

공고구미는 올해 사원건축 부문을 다른 건설사에 양도한 뒤 회사명을 케이지건설로 바꿨다. 이 회사는 쇼토쿠(聖徳) 태자의 명령에 따라 백제에서 초빙된 3명의 장인이 서기 593년 창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3명의 백제인은 이국 생활의 어려움과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뒤 사찰을 짓는 건축회사를 세웠다.

일본이 자랑하는 호류지(法隆寺)와 사천왕사도 쇼토쿠 태자의 명에 따라 이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원보고 전남 해안 관광 활용 서둘러야”

김성훈 상지대총장 주장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건전한 해안공동체 형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목포해양대 실습선 선상에서 ‘해안공동체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성훈 상지대총장(전 농림부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지방화와 국제화를 동시에 겨냥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전남도 해안은 2천여개의 다도해와 리아스식 구조로 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며 “이를 부가까지 높은 관광자산으로 활용하는 계획부터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양자원 개발은 토착주민을 배제하거나 토지투기형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친환경적 지방화와 국제화를 병행하는 해양가꾸기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장 오재일)과 한국 NGO학회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학자와 해양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11일까지 해안문화공동체 조성과 국제교류 등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북취기자 unipark@kwangju.co.kr

박광태 시장 “영산강 살릴 대선후보 지원”

전문화수도 등 국고지원 협력 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회

민주당과 광주시는 11일 오전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은 이날 시정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광주~완도 고속국도 노선연장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 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개선, 광주 국립종합과학관 건립사업비 지원,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 국비사업 매칭펀드(대응자금) 문제점 개선과 지방이전 기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등 4건의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영산강 개발을 위해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영산강 개발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

주시와 전남도는 영산강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영산강 개발 계획은 7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하상을 10m 가량 준설, 영산강이 물류와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의 호남인 소외에 대한 사과는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예산반영 등 가지적 실천 여부를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당과 광주시는 11일 오전 광주시정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 확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탄핵 소신엔 변화 없다”

광주 은 조순형 민주당 상임고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7·26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2년3개월만에 정권권에 복귀한 조순형(서울 성북구) 민주당 상임고문은 11일 광주시정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정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탄핵의 주역이라는 말이 듣기 좋지는 않지만 당시 탄핵에 동의했던 주인들이 모두 달아나는 바람에 (내가) 탄핵의 주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식이 얼마 안될 뿐만 아니라 임기도 얼마 안남아 탄핵할 계재가 아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취임 당시의 감격스러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운영에 임할까 바



조했다.

정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순형발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정계개편은 한화갑 대표와 장상 공동대표가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는) 아직까지 구상한 바가 없다”면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정권이 정계개편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어느 대통령이나 정권도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노 정권 같이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이나 언론을 적대시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치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오류를 시인하고 고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기아차 파업 손실 577억

어제부터 산업거부 피해 커질 듯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조측이 지난 7월 18일부터 3일간, 이달 7~11일 부분파업을 벌여 차량 3천755대, 577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아차 전체의 손실은 차량 1만2천414대, 1천881억원에 달한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파업수위를 높여 11일 주·야 4시간, 14일 주·야 4시간, 16~17일 주·야 2시간, 18일 주·야 4시간, 21일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을 펼쳐기로 했다. 특히 11일부서는 파업을 거부키로 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는 하루 2시간씩 추가돼 손실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0여개의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들이 하루 2~4시간 생산라인을 돌리지 못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손실은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하남산업단지 A 협력업체 대표는 “광주공장 부분파업은 중소기업체 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는 하루빨

리 협상을 타개, 정상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16차 소위원회 회의를 가진데 이어 16일 15차 본교섭, 17일 17차 소위원회 18일 16차 본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정부-민간, 200억 규모 대북 수해지원

정부는 11일 북한 수해 복구를 돕기로 결정, 100억원 정도를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쌀과 복구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북지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98억6천만원 상당의 구호품과 정부 지원금 100억원을 합쳐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복구장비

등 모두 200억원 상당의 물자를 복송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광부차관 경질 파문 커지나

유 전차관 “인사청탁 거절 때문” 靑 “산하기관 감독 태만이 원인”

취임 6개월만에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자신의 경질 사유가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거절한 때문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부적절한 인사개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보수석실의 이백만 수석이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에 특정인사를 청탁했다는 유 전 차관의 주장과 관련, “청와대의 각 수석실은 각 유관부처와 인사협의를 하고

있으며, 홍보수석실쪽에서 문화부와 아리랑TV 부사장 문제를 협의하고 추천한 것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의 경질사유와 관련, “유 전 차관은 신분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신문위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유동원이 부도 직전까지 갔고,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면서 “산하기관 관리감독 태만, 상부 보고 묵살 등이 경질의 핵심이유”라고 주장했다.

유 전 차관은 이에 앞서 청와대의 인사입력문제와 관련, “처음엔 이 수석이 부탁했고 이어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여러번 얘기했다”면서 “아리랑TV와 한국영상자료원장 인선 압력은 일부에 해당된다”고 폭로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시설

또 ‘코드사면’...사법권 위에 사면권 있다

정부가 11일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광복절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지만 목표는 논쟁이 되풀이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코드 사면’이다.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신계를 전 의원과 안희정 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정치인이 포함됐다. 정치인은 사면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자금 비리 관련자라는데 있다.

정치자금 비리는 그 해악이 커 개인 비리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에 맞다. 잘못된 정치를 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에 따른 희생자’ 운운하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법권 위에 사면권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경제계 인사들이 대부분 배제된 것도 논란거리다. 경제계는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종사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만한 경제인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기업의 투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도 이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입맛대로 측근인사들을 사면·복권시켜 장관에 임명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은 본래 취지와 법리에 맞지 않다. 정치권은 사면권 개정을 통해 사회정의에 맞는 법치·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진교 “무안공항 내년 개항” 약속 지켜라

추진교 건설교통부 장관이 10일 대한 상의에서 열린 ‘무안 기업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무안 기업도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분위기가 선속되면 무안국제공항을 1년 앞당겨 내년에도 조기 개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교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의 견교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지난 200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으로 완공시기를 3년이나 연기시켰고, 이후 견교부가 다시 똑같은 경제성 문제를 들어 2008년 말 이후로 개항 시기를 미뤘다.

우리는 무안공항의 개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무안공항은 현재 진행중인 무안기업도시를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 남악 신도시, J프로젝트와 같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핵심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호남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건설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를 의연하고 호남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무안공항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성을 들어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에 반대하는 견해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명색을 깔아 놓아야 사람이 모이지 않겠는가. 변변한 공항 한 곳 없는 지역에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코앞의 수요나 효율성만 따져서는 지역균형개발은 요원하다.

무안공항은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개항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안공항이 내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당장이라도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15사면 경제인 축소... 힘 잃은 ‘뉴딜’

與, 재벌총수 배제에 불만 고조

黨·靑 양급 깊어질 듯

“이래서야 ‘딜’이 잘 되겠느냐”(여당 관계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뉴딜’ 행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 계획에 따르면 여당과 재계가 건의한 경제인 사면의 폭과 내용이 기대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탓이다.

절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격인 재벌총수의 사면이 배제됨으로써 ‘양과 질’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물론 전문경영인이 상당수 포함되기는 했지만 ‘오너 경영인’은 리스트에서 빠져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제인 사면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이 나온다.

경제인 사면은 김 의장이 지난달말 ‘뉴딜 정책’ 추진을 공표하면서 재계에 약속한 ‘선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결과는 단순히 사면 폭 축소에 따른 ‘실망감’ 차원을 넘어 뉴딜 자체의 성사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여당은 경제인 사면과 규제완화를 서로

추고받는다든 의미의 ‘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당은 일단 실망감과 난처함이 뒤엉킨 듯한 표정 속에서도 “당초부터 경제인 사면 대상이 많지 않았다”며 할말 짝 물러서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애초부터 경제인 사면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벌총수는 없지만 전문경영인은 꽤 들어가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청와대를 향한 불만이 끓고 있는 분위기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려는 여당의 노력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당이 요구했던 경제인 사면의 범위에 대한 사면은 그대로 밀어붙인대 대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약속한 ‘선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결과는 단순히 사면 폭 축소에 따른 ‘실망감’ 차원을 넘어 뉴딜 자체의 성사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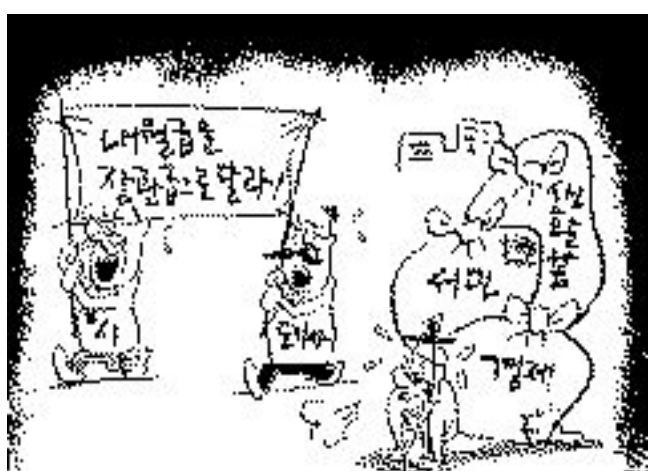
재계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여당은 경제인 사면과 규제완화를 서로 추고받는다든 의미의 ‘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당은 일단 실망감과 난처함이 뒤엉킨 듯한 표정 속에서도 “당초부터 경제인 사면 대상이 많지 않았다”며 할말 짝 물러서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애초부터 경제인 사면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벌총수는 없지만 전문경영인은 꽤 들어가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욕을 못먹어서 저런지...